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58호)

○ 2018. 12. 12.

○ 운영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2. 10. 김정우 의원 외 6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 12. 11.

다. 상정일자 : 2018. 12. 12.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우 의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최형순)

■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8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 법적검토

○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이에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 조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임.

■ 행정안전부 해석

-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원 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불신임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불신임의결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사항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음.(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 관련사건 판결

- 관련 사건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규정을 「회의규칙」에 두어 이를 근거로 상임위원장 불신임으로 의결한 사항이 재송화 된 사건으로 그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회의규칙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과 같은 회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법 제71조가 회의규칙 제12조(당시,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항임)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법률이나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 제8조 제3항, 제7조 제1항 본문(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칭함),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에서 해임하는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회의규칙 제12조는 위 법령과 조례 조항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 “불신임의결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해임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므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 “조례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에 관하여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신임 사유와 절차도 명백하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2011누17440 불신임의결등취소, 2012. 1. 11 선고)

■ 종합의견

- 본 사건은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위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를 보면, “법률이나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회의규칙 제12조는 위 법령과 조례 조항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조례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관하여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신임사유와 절차도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음.

-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 의결 규정 명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위 판결문 내용의 문안 해석상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지는 바,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의결 조항을 규정한다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참고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와 같은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타구 조례에 명문화한 사례가 있는지 ?

답>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7개가 있음.

질> 신설조 제1항의 법령의 위반시점은 ?

답> 상임위원장 임기중의 법령위반에 대한 것임.

4.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체계짜구쟁리내용 : 없음